

‘구제금융 시대’의 인문·사회과학

강 내 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 구제금융 시대와 대학

작 년말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만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40여 년간 경제적으로 성장밖에 몰랐던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다.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결과 경제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고금리 정책과 긴축경제 등이 처방으로 나오면서 경제 전반이 얼어붙어 버렸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줄지어 도산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마저 망하는 판이다. 그동안 연 6~7% 이상 치솟던 경제 성장률은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하고, 15년 만에 급상승한 실

업률로 올해 안으로 실업자수는 200만 명이 나 될 것이라 한다.

나라 안에서 구제금융의 높은 파고에 휘청이지 않는 분야는 없어 보인다. 대학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던 대학들의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몇 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학까지 생긴 모양이다. 대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듣고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어려운 ‘구제금융 시대’에 대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인문·사회과학은 구제금융과 그로 인한 긴축경제의 파고를 어떻게 탈 것인가?

아무리 난국이라고 해도 구제금융 시대가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협상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크

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할 것은 아니다. 마침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되어 중요한 정책 변동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변동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근본 방향을 바꿔놓을 것 같지는 않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 있고,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의 전 영역을 자본의 운동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노력으로서 정부의 축소,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제금융 시대의 전개와 새 정권의 출범으로 이런 신자유주의 경향이 중단될 것인가?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권과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정책을 쓸 것인가? 전임자가 '세계화' 전략을 내세우며 재벌의 경제지배를 더 강화한 바람에 경제파탄을 가져온 것을 아는 만큼 새 정부는 재벌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 하겠지만, 신자유주의 기조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자본이 독식하던 한국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대학사회에도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다. 1995년 이후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한 대학개혁 과정에서 대학 운영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자거나 교육에서도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학과들을 통폐합하거나 학부제를 추진하고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였는데, 이 조치들은 교육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문 운영에 자본주의적 경쟁의 논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구제금융 시대'가 전개되기 이전에 이미 신자유주의가 대학에 침투한 것이다.

하지만 '구제금융 시대'라는 특정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황으로 미등록자의 수가 늘고, 금융 위기와 함께 대학의 도산까지 우려되는 마당이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타할 수단도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학과 통폐합과 같은 조치들도 전과는 다른 당위성과 속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대학들이 이미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추진하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시기가 온 것이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대학에 확산하게 되면, 학문과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 정도는 더 높아진다. 자본의 축적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문을 위한 학문, 교육을 위한 교육과 같은 명분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 등이 사회적 목표가 되어 있고, 국가부도의 위험에 직면하여 '국가혁신체제'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는데, 한가하게 학문과 과학의 순수성을 찾을 수도 없어 보인다. 학문과 지식의 기술화나 영리화의 필요성이 커질 터이니 교육과정을 실용화하고, 학문과 지식을 도구화하며, 산학협동을 추진하라는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문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통폐합의 주된 대상이 되거나, 교육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쪽은 기초학문 분야였다. 기초학문 분야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은 사실 이미 위기에 빠져 있는 셈인데, 구제금융 사태로 더 나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2. 대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인문·사회과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포괄한다. 크게 보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대별될 수 있겠지만 문학(국문학,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 등), 철학, 신학, 미학, 인류학, 사학(국사학, 서양사학 등),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인류학, 고고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다. 이들 분야는 철학과 같이 고대부터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인류학이나 사회학처럼 지난 한두 세기 사이에 등장한 것도 있어서 그 발생과 존립의 조건 및 내력이 다양하다. 신학의 경우 중세에는 철학을 압도할 정도였으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었고, 문학의 한 분야인 영문학의 경우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대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성립하기 시작하였다. 개별 분야들의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사학의 경우 인문학과 사회과학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논란이 있고, 고고학이나 심리학, 언어학에는 자연과학과 혼동되는 부분마저 있다.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학문 분야들의 특징이나 공통분모를 일반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들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포괄하여 '인문·사회과학'으로 통칭하는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 분야는 예술과 구분된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이 예술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술이 감각 혹은 감수성의 창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인문학으로서 문학은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는 별도의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

표로 한다는 점에서 예술과는 구분된다. 문학교수 가운데 소설가, 시인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되, 비창작자가 더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특정한 예술을 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문학이 예술과 구분될 수 있다면, 철학과 사학, 나아가 사회과학이 예술과 구별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다른 한편,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크게 구별된다. 자연과학이 예외없이 자연을 대상으로 삼고 그 이치를 규명하려고 한다면,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주요한 탐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인간과,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가 빠진 상황이 문제가 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문·사회과학의 기본 과제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적 삶의 현실이 만드는 갖가지 현상들, 실천들, 경향들, 특징들을 파악하고, 문제들을 발견하고 비판하며, 인간적 삶의 풍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들은 자본주의적 근대문명과 함께, 자본주의적 삶의 구조와 관리 혹은 정당화 등을 위하여 탄생하였거나 자본주의 근대문명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 특징이나 성격이 새로이 형성되었다. 주류 학문에서 보면 사회과학은 사회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향은 경영학, 회계학과 같이 자본주의적 지배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등장한 연소한 학문 분야일수록 심하다. 물론 학문이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철학의 경우 자본주의 이전에 탄생하였지만 19세기 이래 적어도 일부가 비판이론으로 쇠신된 바 있고, 문학의 경우 문학

작품 속에 깃든 비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한 문학비평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도구학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할 경영학에서조차 기업 조직의 자본 예측 논리를 비판하는 비판적 조직이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도구학문이든 비판학문이든 근대의 학문들은 거의 예외없이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제도 안에 그 터전을 두고 있다. 물론 학문이 대학에서만 존립하라는 법은 없다. 중세에는 수도원이 학문을 수용하는 중요한 기관이었고, 오늘날도 종교기관에서 학문을 제도화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 최근에는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중요한 학문기관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대학을 능가하는 학문제도는 없다. 학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한데, 대학은 다른 학문기관에 비하여 재원 확보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다. 교육기관인 관제로 교육의 대가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이다. 연구소의 경우 대학이나 대기업의 부설기관으로 존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독자적으로는 학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로 기금이 없는 연구소가 기초학문이 아닌, 경영학이나 공학과 같은 응용학문에 의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단기적인 수익성을 지닌 학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문·사회과학, 그것도 기초학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학을 떠나서 존립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하겠다.

근대사회에서 대학은 근대적 국가 형태인 민족국가의 지도이념을 제공하고, 민족국가에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제도의 운영을 위

한 인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대학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점의 위상을 가지면서, 사회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을 제공한다. 그런데 대학이 이처럼 근대사회의 중추기관이 되면, 사회의 지배적인 경향들을 외면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날 대학에 편성된 수많은 학문 분야들이 자본주의적 가치들을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이념으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대학제도 자체가 기업 등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자본의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대학이 자본주의 문명 비판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한다. 대학에 비판학문이 깃들 수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일반이 사회의 지배논리를 수용하게 될 때 학문은 어떻게 되고, 인문·사회과학은 어떻게 될까? 특히 신자유주의가 인문·사회과학의 운영 원리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구체금융 시대의 인문·사회과학'이라는 화두는 바로 이 질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거처인 대학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 시점에 인문·사회과학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대학은 1980년 이후 급속도의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21세기를 코 앞에 둔 지금 그 성장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 대학 진학 희망자수와 입학정원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입학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을 받기도 어려워졌거니와 재학생마저 대도시 소재 대학들

로 편입하려는 경향이 늘어나 운영이 어려워졌다. 대학사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겪는 대학의 인문·사회과학 학과나 프로그램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문·사회과학이 그동안 발전을 이루었다면, 대학생 인구가 늘어나고 신진교수들을 대거 채용한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조건은 사라지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의 성장은 대체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이 확장될 때 이루어진다. 대규모 기간사업이 일어나고,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제도의 확립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며, 문화활동이 활발해질 때 인문·사회과학의 토양이 쌓이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사회 곳곳에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므로 자연히 전문지식의 성격이 강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대학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요구의 증대는 서구처럼 공공부문의 확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난 40여년 사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주로 기업이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한국은 이제 고도성장의 한 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있다. 시장이 얼어붙었으니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취업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취업 영역은 국토개발과 같은 공공사업 부문, 사회복지 부문, 교육 부문,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문화예술 부문 등인데, 한국에서는 이들 공공부문이 전통적으로 취약하기도 하려니와 구제금융 시대인지라 확장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경기 부진으로 그나마 취업할 기회를 주던 시장마저 위축되고 있으니, 인문·사회과학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3. 근대적 지식생산의 문제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이 위기를 맞은 것이 외부적 요인들 때문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내부 문제들에 기인한 측면이 더 많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대학들은 근대적인 지식생산 양식에 특유한 문제점들을 누적해왔다. 특히 학문을 조직하는 방식 혹은 편성하는 방식이 문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학문 편성은 거의 대부분 분과학문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개별 분과학문들의 독립성을 거의 절대적인 학문제도 구성의 기준으로 삼아 분과학문들을 나열하는 식이고, 개별 학문으로 구성된 학문제도인 학과들을 펼쳐놓은 방식인 것이다. 학과들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관계나 상호 교통도 없다. 학과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공학 등으로 분류되어 단과대학으로 단순 배치되어 있을 뿐 상호간의 연관에 의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물론 최근에 여성학과 같은 협동과정이 생겨나면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학문 분야들을 특정한 방식에 의해 연계하는 일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드문 일이다. 학문 분야는 이처럼 나열되어 있는 반면에 대학은 학과, 단과대학, 처·실, 대학본부, 재단 등으로 위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문 연마와 교육의 산실인 학과는 늘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는 위치다. 이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대학 형태인 종합대학의 모습이다.

인문·사회과학 역시 대학의 이런 학문 편성 방식에 얽매어 있다. 주로 문과대학이나 인문대 혹은 사회과학대 등의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배치되어 있지만, 인문·사회과학과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과와 학문 분야와의 교류는 물론이고 인문·사회과학 내 교류도 거의 없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에도 당연히 깊은 심연이 놓여 있는데, 이는 같은 학과에 배치된 학문의 개별 전공분야들 사이에도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 결과 정약용과 같이 『목민심서』로 치인(治人)의 방도를 연구한 이가 민중의 피폐한 삶을 걱정하는 시를 짓고, 나름대로 언어이론을 세우며, 나아가서 수원성을 설계하는 통합적인 학문의 길은 오늘 한국의 대학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문학적 감수성을 도야하는 일과 삶의 중요한 조건을 규정하는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일,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기획하는 일 등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 통합되어야 하건만 학문의 편성이 아예 학문 분야간 교류를 막아 놓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분열과 파편화는 근대적 대학에 거의 보편적인 양상이지만, 한국 대학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이 이처럼 분열되어 있고 또 학과의 틀 안에 갇혀버린 결과, 근대적 지식은 현실 적응성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고 인문·사회과학은 오늘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 예컨대 최근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느는 등 고용조건이 크게 바뀌면서 요청되는 지식과 기술의 종류도 바뀌고 있는 점을 생각해도 그렇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어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많은 노동인구에게는 ‘과정기술’(process skills)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정기술’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라기

보다는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일종의 적응 기술이요, 이전 기술과 현재의 기술을 연계하는 메타 기술이요, 다양한 기술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기술의 성격을 크게 가진다. 대학의 인문·사회과학은 그런데 이런 기술을 전수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분과학문적 체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지식과 기술이 지극히 단편적이요, 파편적이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과학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지식과 능력은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고용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한다. 문과계열 학과의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필수 학점만 이수하고 나면, 전공학과의 과목을 듣지 않고 취업에 유리한 경영학 등을 수강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식의 파편화를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겠지만,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는 대학의 모습이나 기능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직도 많은 대학들은 학부과정의 교육을 학자 양성용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학교육이 그동안 양적 팽창을 이루어 적어도 그 규모로는 명실상부한 대중교육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학부과정의 교육이 인문학자,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인 양 치부하고 있으니 부질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육이 대중화할수록 교육이 부실해지기 쉽고, 특히 학문이 교육에 종속되는 경향 때문에 학문 수준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늘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 이, 삼백 명을 가진 학과에 열 명도 안 되는 교수들을 배치한 채로 학자들을 양성한다는 것

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겠는가. 엘리트 교육의 환상은 대학교육의 도구화에 못지 않게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학문 운영도 문제다. 학문 분야간에 철통 같은 벽이 쳐짐으로써, 개인의 전공 분야 밖으로 관심을 돌리기라도 하면 바로 학문 분야 안에서 지켜져 오던 관행이나 그 내적인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지탄받는다.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전공으로 삼던 학문 분야가 아닌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한 경우, 교수 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예사라 전공을 바꾸는 일은 큰 모험이 된다. 학문의 이런 동종교배와 아울러 본교출신 선호 관행으로 학문의 폐쇄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곧 학문을 운영하는 대학인이 학문에 대한 분점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관행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전공분야 이외의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것마저 제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문의 폐쇄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내 대학에서는 신생 학문이나 실험적 학문을 개척할 길이 봉쇄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민주화가 진척되지 않아 진보적인 사상은 경원시되었고, 대학 내부에서도 학과 내부의 선배 혹은 원로 교수의 학문권력의 과도한 장악으로 새로운 발상을 개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이 대학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사회의 과거, 미래, 현재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데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고 만다.

인문·사회과학은 지금까지 대학이 분과학문을 중심으로 학문을 편성하고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학의 혁신에 인문·사회과학이 기여한 바는 별로 없었다는 자성이 앞선다. 한국의 대학과 함께 인문·사회과학은 결국 오늘 우리 사회가 맞은 위기의 한 원인이 아니었던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우리가 기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 것은 그 때문이다.

4. 인문·사회과학과 근대문명

오늘 인문·사회과학과 대학,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가 위기에 빠진 것은 인류가 근대문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문명은 오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 학문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드러나고 있다. 근대적 지식과 그 생산양식은 근대문명의 소산이다. 그런 점에서 인문·사회과학도 근대문명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근대문명의 힘은 강고하다. 아직도 개발을 위한 파괴를 일삼고, 소수 재벌 혹은 독점 자본의 전횡을 부추기며, 인간적 삶의 추구하고 반성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파괴적 문명을 인류 전체와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상생의 문명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의 발전도 자연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이어야 하며, 인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제도의 도입, 그리고 타율적인 삶이

아닌 자율적 삶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이런 새로운 문명의 꿈을 꿀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구제금융 사태도 자본주의적 근대문명을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제금융을 불러 일으킨 외환위기를 단순히 외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동안 채택한 자본주의적 근대문명이 지닌 사회적 경향들이 응집하여 구성된 메커니즘에 내장된 고장과 같은 것이다. 외환위기의 일부 책임은 한국은행, 재정원, 청와대 등에서 외환 관련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개선적인 상의하달의 의사소통 및 권력 구조 때문이라고 한다.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유통을 이들 전문집단이 독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조차 이들이 배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방안들을 마련할 기회를 잃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민주적 구조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 과소비 등 고비용 저효율을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 정태수 한보 회장의 '머슴론'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재벌의 전횡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일지 모른다.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만든 근대적 사회체제에 내장된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근대화 혹은 근대문명의 건설을 목표로 고도 성장을 꾀하면서 구축한 사회 운영체제가 이제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이다.

축적을 자신의 유일한 운동 목표로 삼는 자본의 논리가 계속 지배하는 한 이런 위기의 내재화 현상을 극복할 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 경제위기는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을 막아낼 사회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과잉생산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유효수요의 확대는 과소비를 조장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질주를 하게 되며, 결국 시스템 전체의 고장 없이는 멈추기 어려운 가속도 기계처럼 움직인다. 이윤 창출의 동기에 따라 삶과 일상을 조직하여 유효수요를 증대하려는 한, 개발 논리를 펼치며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위기는 이 문명의 동요에서 비롯된다. 근대 문명은 지난 40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하던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문명이나, 이 문명은 그동안 발휘하던 발전의 동력을 잃고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 시대에 인문·사회과학이 깊이 인식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문명의 동요가 아닐까 싶다. 인문·사회과학이 피폐해진 것도 근대문명의 한 양상이다. 인문·사회과학이 갱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식생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인류의 문명을 내다보며 새로운 학문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인문·사회과학은 문명의 전환을 꿈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꿈을 꾸려면 인문·사회과학이 자신의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5. 지식생산의 탈근대화

학문의 혁신은 학문이 생산하는 지식의 혁신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동시에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을 혁신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의 혁신은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이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의 혁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분과학문으로 편성되어 있는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학문생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과학의 혁신은 분과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을 통합적 지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과학문 체계로 구성된 근대적 지식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학문 편성 방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분과적 경계들을 해체하고 학문 분야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인문·사회계열의 학문 분야들은 문학, 철학, 사학, 정치학, 지리학, 경제학 등의 분과학문을 한 축으로 하고, 언어적 차이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민족국가를 한 축으로 한 구분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문학의 경우는 주로 영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등에 따라서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으로 독립된 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이 당장이 두 축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칙을 가진 것은 아니나, 적어도 두 축의 결합을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물론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에게까지 기존의 학과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분과학문 중심의 학문 편성의 일률성은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독일학, 미

국학과 같이 여러 분과학문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민족언어와 문화예술도 다루는 지역 연구,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정체성 연구(여성학, 흑인연구, 소수인종연구 등), 기호와 이미지의 시각문화 구성방식과 그것의 정치경제적 작용, 나아가 뉴미디어, 대중매체의 작용 등을 다루는 문화연구 등이 다양한 학문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학문체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문제도에 학과, 학부, 협동과정, 연구소 등의 형태가 있다. 현재 대학들이 그동안 학과제도로만 학문을 편성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과는 분과학문 체계를 고수하는 데 필요한 학문제도로서, 오늘날 학문 편성의 기본 방식이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 구성원의 내부 결속이나 학문 전통의 계승에 필요한 학문제도 형태일지는 모르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학처럼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학과에 학문을 배치하는 경우, 스승과 제자나 선·후배간의 비의적(秘義的) 연대는 구축하는지 몰라도 학풍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학과들을 통폐합하는 일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학과를 통폐합할 때는 지금처럼 교육부의 지시나,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보다는 교수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 모든 학과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식도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학문의 배치 방식이 일률적인 것보다는 다양해야만 학문의 발달과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학과체제로 종합대학을 꾸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학은 현재의 체제 위에 협동과정들을 도입하여 일부 교수가 이중 멤버십을 가지며 학과와 협동과정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대학은 아예 학과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변신 노력이 필요하다.

분과학문 체계를 지양하고 학문제도를 다양화하자는 것은 지식생산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야만 대학이 근대적 문명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문명의 한 중추로서 대학은 그동안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동시에 자연과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왔지만, 이제 사회의 혁신에 기여하는 능력을 크게 상실하였다. 대학에서 생산하는 지식이 혁신되지 않고, 특히 대학이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이 혁신되지 않은 결과다. 지식 생산양식의 혁신은 대학과 학문의 기능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고, 지식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문이 지배도구가 되거나 사회통제의 기술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적 삶의 풍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생산방식 자체가 바뀌어 학문활동이 창조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학문 운영의 민주화, 학문 권력의 독점 방지, 학문의 동종교배 지양 등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창조적 학문 활동을 위해서는 근대적 지식생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그보다는 학문과 지식생산 자체가 사회와 문명의 혁신과 전환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

향이다.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도 '생산라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생산라인은 학문제도로서 학과, 학부, 협동과정, 연구소, 실험실 등이다. 한국의 대학은 이들 생산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구조가 총장 혹은 이사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트 모습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는 행정조직이 연구와 교육의 지원조직이라는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학문과 지식의 생산라인을 행정조직의 하부에 놓은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식생산에 창조성이 발휘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지식생산에는 반드시 민주화가 전제되는 법인데, 위계적 조직에서 그런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보되겠는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식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 것이 학문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시에 학문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사회의 민주화 못지않게 대학 내부의 민주화가 중요함도 알아야 한다. 학문과 지식의 생산라인의 혁신은 생산라인 운영의 민주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대학이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학문 생산라인을 조직할 수 없을 때, 사회에 지도력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틀을 과거와는 다르게 바꿔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은 대학의 이런 혁신적인 구조조정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영역에 대한 새로운 조정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문·

사회과학이 학문제도들로 배치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자신이 혁신될 때,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인문·사회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릴 것이다.

6. 맺는 말

한국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늦출 겨를이 없어졌다. 구제금융 시대의 도래는 그렇지 않아도 궁지에 몰린 인문·사회과학에 종사하는 대학인으로 하여금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위기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한국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최근에 발생한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근대성의 위기의 한 양상이요, 지난 수백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오던 자본주의 중심의 근대문명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 위기는 경제위기를 극복

하는 것만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경제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삶의 형태의 설계, 즉 문명의 전환이 요청된다. 인문·사회과학의 과제는 이 설계와 전환을 위하여 스스로 혁신하면서 대학의 모습을 바뀌내고, 나아가 새로운 문명을 구성해내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책무를 안게 되었다. ♣

강내희/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마케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문화이론전문지 『문화과학』 발행인,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분과학문 체계의 해체와 지식생산의 ‘절합적 통합’”,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탈근대 관점에서 본 문학법주 비판과 옹호의 문제들” 등이 있고, 저서로 『공간, 육체, 권력』과 『문화론의 문제설정』 등을 발표했다.